

시론



오수열

조선대 명예교수·광주유학대학 학장

정치가 실종된 나라

이 모두 도모되고 있지 못한 셈이니 가히 정치의 실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다.

도대체 정치(政治)란 무엇일까?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정치를 정의(定義)했지만, 필자는 “정치는 사회적 가치(價値)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의 말이 가장 적실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정돼 있는 사회적 가치를 잘 배분하기 위해서는 분배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 즉,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권위를 지녀야 할 터인데, 이 권위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여기에서 다시 공자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선지로지(先之勞之)하라”가 그것이니 요즘말로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힘 있는 자가 먼저 하라.”는 것으로 조금 확대하면 “먹을 것이 있을 때는 힘 있는 자가 나중에 먹어야 한다”는 뜻인 것이니 서양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통령은 영부인의 리스크에 휘말려 허우적거리고 있고, 의회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제야당의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찌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선 대통령의 경우, 목사의 교임에 넘어갔든 어쩔든 아내가 고가의 가방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국민들 앞에 사과하면 어떨까? 아당대표의 경우 또한 몇 톨 되지는 않지만 역시 아내가 법인카드를 잘못 사

용한 것은 사실이니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다시 공자의 말씀을 원용해 보자.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하라”고 하였으니 “잘못을 범하였거든 고치는 것을 두려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잘못을 했거든 솔직히 시인하고 고치면 되는 것이다.

지난날 여러 대통령들도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일에 직면한 적이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아들 현철씨의 문제로, 김대중 대통령 역시 아들 홍일씨의 문제로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야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 문제로 사죄했으나 결국 탄핵까지 당해야 했다.

어려운 경제와 안보상황 속에서 대통령과 국회의가 언제까지 건곤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문제에만 매달려 정치를 실종시킬 셈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지금도 국회에는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심의되지 못한 채 의원들의 눈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 사이 많은 어린이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죽거나 다치거나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복(國民福)이 도모될 터인데, 올해 달력도 달랑 두 장 남은 것을 바라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하για 공자도 어지러운 세상을 한탄하며 제자들과 함께 말년을 보내야 했으니 세상은 2천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다.

社說

총체적 부실 직면 광주관광공사 혁신은 빈말이었다

광주시관광공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진땀을 빼야 했다. 시티투어버스·광주투어버스 관리에 있어 법규 위반 등 부실한 실태가 드러난 때문이다. 먼저 시티투어버스 가운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취득해야 하는 한정면허 없는 차량이 운행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한정면허 승인을 받은 차량 2대 중 1대는 과업요청서와 달리 랩핑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아울러 보안 연결이 되지 않은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아 이용객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설치된 광주투어버스 승강장은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구역’이어서 승·하차가 이뤄지는 모든 차량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투어버스는 관광객 및 시민의 편의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더 있다.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시티투어버스를 2년간 방치해온 것도 도마에 올랐다. 필수인원인 미화 공무직 결원이 2명 중 1명으로 가장 높고, 2-3개월 단기 용역으로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단체 협약과 관리 운영 내규 위반 사항이다.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의도적으로 편집했거나 잘못 기재하는가 하면 의회가 요구한 내용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광주투어버스 운전자 유니폼이라고 한 사진은 해당 운수 업체에서 다른 목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에 대한 신뢰를 의심케 만드는 기만적인 행동이라고 하겠다. 실상이 이 정도면 ‘총체적 난국’이라 할만 하다. 제반 사업 관리가 엉망인데다 책임감도 부족해 보인다. 지방 공기업의 안일한 경영,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질타가 지속해서 나오는 이유를 짐작케 한다.

더 이상 역주행을 바라지 않는다. 2026년 이용인구 3천만명이 즐기는 광주를 만드는 데 역할이 커서다. 광주관광공사는 ‘익사iting 관광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 7월 기존의 김대중컨벤션센터와 광주관광재단이 통합해 새출발을 알렸다. 새로운 미래 100년을 그리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다짐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심히 우려스럽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유죄 선고가 순리일 것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에 신축 중이던 화정아이파크 붕괴로 근로자 6명이 죽고 1명이 다친 대형사고가 났다. 관련해 17명이 재판에 회부됐는데 검찰이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내년 1월 20일 예정돼 있다.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 관리 감독의 부재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인재로 드러났다. 합당한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산업개발 소속 당시 현장 소장 등 직원, 하청업체인 가현건설산업, 감리업체 광장 법인 소속 피고인들은 동바리 미설치와 공법 변경, 콘크리트 품질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법인 3곳에는 벌금 1억~10억원을 적용했다.

모두 유죄라는데 이의가 없다. 검찰은 현대산업개발이 학동 붕괴참사(17명 사상)를 내고 개정을 다짐해 놓고도 7개월 만에 화정동 참사를 일으켜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시공사, 하청사,

감리사 등인 피고인들은 전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고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질책했다.

800여 세대 규모의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38층 최상층부터 18층까지 한쪽 벽면 귀퉁이가 함몰돼 잔해물이 지상으로 낙하했다. 2022년 11월 입주 예정이던 해당 건물은 주거층 부분 철거 뒤 재시공 절차에 착수하며, 입주예정자들은 물론 피해를 입은 주변 상인의 고통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눈 앞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그대로다.

게다가 2022년 5월 첫 재판을 시작했으나 다수의 증인 신문, 법원 인사에 따른 재판부 변경 등으로 장기화되는 상황이다. 1심 선고가 사고 발생 3년 만에 나올 전망이다. 피고인들은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진실된 마음으로 속죄해야 한다.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준으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더는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고



김미남

前 청와대 행정관

광주·전남 행정통합 서두르자!

제는 이런 이슈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광주·전남 행정통합 이슈가 재부상했다. 지방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행정통합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답보 상태인 호남권 행정통합 논의를 지적했다. 타 시·도 간 활발한 논의와 달리 광주·전남은 단절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광주·전남 모두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겠지만 적극적이지 않았다. 2020년 광주시가 제안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결과가 나왔다. 1단계 상생발전협력, 2단계 경제통합, 3단계 행정통합으로 이어지는 방안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목표나 시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통합에 필수적인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세부적 계획도 없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와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

통합을 위한 추진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각각 3가지 이유로 압축해 정리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왜 필요한가?

첫째, 광주·전남은 모두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청소년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체계적인 인구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비슷한 정서와 생활권임에도 별도의 행정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와 예산이 중복되고 있다.

셋째, 수도권 중심의 발전 구조와 쏠림 현상으로 경제 발전도 뒤쳐져 있다. 지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중심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행정통합의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첫째, 경제적 시너지 창출로 큰 경제 규모를 형성하게 된다.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인프라 통합과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별도의 교통, 물류, 교육, 의료 인프라를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비용 절감과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이다.

셋째, 우수한 문화와 관광 자원의 통합이다. 통합된 행정구역은 문화와 자원들을 하나로 결합하여, 훌륭하고 매력적인 관광 상품으로 개발될 것이다. 이를 통해 관광 산업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통합을 위한 추진 방향과 전략은 무엇인가?

첫째, 시·도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다.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며 의견 수렴, 공청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채널과 행정력을 집중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통합에 따른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각종 비전 제시와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행정통합을 위한 추진과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도민의 신뢰를 최대한 쌓아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글로벌 경제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광주·전남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오랜 역사를 견주어 봐도 한 뿌리의 공동운명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서두르자. 갈수록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현실에서 통합은 생존의 문제다.

독자투고

풍성한 가을 수확철을 맞아 어김없이 발생하는 농산물 절도로 인해 농민을 울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연평균 541건의 농산물 절도사건이 발생했다. 피해금액이 적어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도 많아 실제 도난 사건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농산물 절도범 검거율은 41.8%(226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검거했다더라도 피해품 회수에는 어려움이 많아 농산물 절도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수확철 농산물 절도 예방 각별한 주의를

먼저 마을에 설치된 자위 방범용 CCTV 작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설치만 돼 있고 작동을 하지 않는 방범용 CCTV는 무용지물이다.

또한 농산물 건조·보관창고 문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며, 마을을 배회하는 낯선 차량 발견 시 차량번호나 색상 등을 기록해두고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인근 지구대와 파출소에 탄력순찰 신청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경찰에서도 10-11월 두 달간 수확철 특별 방범활동으로 주·야간 맞춤형 순찰 강화 및 홍보활동 병행으로 농민들이 그동안 피땀 흘려 지은 농산물이 도난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의 선제적 예방 활동과 농민들의 자위 방범 의식이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올해는 농산물 절도가 발생하지 않고 농민들이 온전한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희·여수경찰서 소라파출소)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 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픽 뉴스

美 “북한군 1만명 쿠르스크로 이동...수일 내 전투 참여 가능”

미국 정부는 최소 1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나 격전지인 러시아 쿠르스크로 이동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주 8천명의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갔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1만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또 북한군이 이미 쿠르스크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대해 질문받자 “그들이 전투를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면서 “나는 그것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하며, 그들이 그렇게 할 경우 합법적인 군사(공격)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쿠르스크에 있는 북한군 수가 1만명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이어 “현지에서 그 수는 약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러시아에 있는 북한군 전체 병력은 1만1천에서 1만2천명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쿠르스크에 북한군 1만1천여 명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밝힌 1만명보다 1천명이 더 많은 수다. /연합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0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동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내선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실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0원